



# 핵심큐

정치와 법

 정답과 해설



# I 민주주의와 헌법

## 01 민주 정치와 법

### 내신 완성 핵심Q 007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⑤	06 ④	07 ③
08 ⑤	09 ③	10 ④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16 해설 참조						

**01** 좁은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넓은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②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단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답 풀이]**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④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⑤ 정치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02** 제시된 사례에서 ○○시장은 지역 내 기피 시설물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는 이해관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03**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ㄷ.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ㄹ.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학급 회의를 열어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 등을 모두 정치로 본다.

**[오답 풀이]** ㄱ.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B)이다.

**04**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되고,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실질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ㄱ. 평균적 정의는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의미의 정의이다. ㄴ. 누진세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상대적 평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 ㄹ.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05** 제시된 자료의 제1조에는 천부 인권 사상, 제2조에는 사회 계약설과 저항권 사상, 제3조에는 국민 주권론이 반영되어 있다. ㄷ. 제2조에서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을 찾을 수 있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권의 보장을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며,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인 저항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ㄹ.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 주권론으로, 제3조의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에서 국민 주권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제1조에 나타난 천부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사상으로, 인권을 국가가 정하는 실정법이 아닌 천부적인 자연법상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제시된 자료에서 입헌 군주제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6** 시민 혁명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신분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대의제의 성립에 이바지하였다. 대의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법치주의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재산·인종·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의 차별이 존재하여 노동자와 농민, 흑인, 여성 등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④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이다.

**07** 제시된 자료는 대표적인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로 보았다. ② 로크는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간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④ 자신의 의지로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08** 좁은 홉스, 넓은 루소이다. ⑤ 홉스와 루소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① 입헌 군주제를 옹호한 것은 로크이다. 홉스는 주권을 모두 군주에게 양도하고 복종하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④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대의제와 삼권 분립은 간접 민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③ 홉스와 루소는 모두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았다.

**09**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 계층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에 이바지하였다.

**[오답 풀이]** ① 사회 보장 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 계층의 참정권 획득을 주장한 운동이었다. ④ 대의제는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되었다.

**[보충 자료]**

- 차티스트 운동: 1830년대 후반 이후 영국 노동자들이 전개한 운동으로, 노동자들의 재산에 따른 참정권 차별에 반대하였다.
-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20년에, 영국에서는 1928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 흑인 민권 운동: 1950년대~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의 인권 보장과 참정권 획득 운동으로, 이 운동에 힘입어 1965년 선거에서의 흑백 차별이 금지되었다.

**10** 대의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직접 민주제의 요소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이 있으며, 이 중 국민 투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의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② 국회 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직접 민주제의 요소와 관련 없다. ③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와 관련 없다. ⑤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대의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11** 법치주의란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을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수권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ㄱ. 입헌주의는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수권법은 법률 제정이나 조약 체결 시 헌법과 다른 규정이나 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입헌주의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 ㄴ. 수권법은 정부가 법률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ㄷ. 수권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 ㄴ. 수권법은 절차적 합법성만을 중시하였다.

**[보충 자료]**

수권법이란 행정부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2월에 독일의 수상이 되어 정권을 획득하였고, 1933년 3월 24일에 수권법에 해당하는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런 견제 없이 제정·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합법적 독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제시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양립이 가능하다. ② 법치주의의 확립이 올바른 민주 정치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14**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양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ㄴ. 법치주의가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할 경우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 ㄷ.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ㄱ.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에 따른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칫 중우 정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15** (1) 법적 안정성

(2) **[예시 답안]**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변동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6** (1) 차티스트 운동

(2) **[예시 답안]**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 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채점 기준]**

상	차티스트 운동의 발생 배경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차티스트 운동의 발생 배경을 노동자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1** 제시문은 국가가 있어야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ㄱ.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가들의 정치권력 획득과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이다. ㄴ.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가 공동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답 풀이]** ㄷ.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ㄹ. 수많은 집단과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넓은 의미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02** 갑국은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을국은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을국이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갑국보다 국민 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ㄷ. 대의 민주 정치와 직접 민주 정치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부합한다.

**[오답 풀이]** ㄱ. 대의 민주 정치도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ㄷ. 직접 민주 정치에 비해 대의 민주 정치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03** 제시문은 19세기 초반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벌인 차티스트 운동의 기초가 된 인민헌장의 6가지 요구 사항이다. ㄱ.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보장을 위한 주장이다. ㄴ. 비밀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해 준다. ㄷ.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철폐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ㄹ. @은 하원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4**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 등 통치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ㄱ. 법치주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이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 민주 국가는 법치주의를 국가 권력 행사의 근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한다.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9 ③ 10 ①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16 해설 참조

**01** A는 국민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B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다. ② 야경 국가 이념은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던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관련이 있다.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④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02** 제시된 자료에서 헌법 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헌법이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가 되며,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ㄷ. 국가 구성이나 권력 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는 헌법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제시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의 권력 통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04** 제시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가가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됨을 의미한다. 헌법은 영토, 국민, 주권 등 국가 성립 요소와 국가 기반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05** 제시문의 (가)는 입헌주의이다.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

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ㄱ. 입헌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억제한다. ㄴ.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에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음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ㄴ, ㄷ.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06**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B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ㄴ.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최초의 형태이다. ㄷ.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 통치 조직의 권한과 상호 관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 혁명에 등장하였다. ㄴ. 불문 헌법은 성문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헌법을 말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성문 헌법이다.

**07** 제시된 헌법 전문 중 ㉠에는 자유 민주주의, ㉡에는 국제 평화주의가 나타나 있다. ㄱ.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ㄴ.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오답 풀이]** 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ㄷ.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조약과 국제 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08** 제시된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이 있다.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② 평화 통일 지향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⑤ 국제 평화주의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09**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10** 제시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는 법치주의,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 등을 들 수 있다. 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 보장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11** 제시문은 최저 임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최저 임금제의 시행은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원리이다.

**[오답 풀이]** 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③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④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⑤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12**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ㄷ. 우리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은 을이다. 국제법 존중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ㄴ.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13** 밑줄 친 ‘A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로,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을 실현 방안으로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②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지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14** 제시된 헌법 조항에는 문화 국가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로,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으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 보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 문화의 창달, 평생 교육의 진흥 등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ㄷ.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시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15** (1) (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 (나) 현대 복지 국가 헌법  
(2) **[예시 답안]** (가)의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형식적 평등과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나)의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채점 기준]**

상	(가)와 (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16 [예시 답안]** ㉠에는 자유 민주주의, ㉡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복지 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원리이다.

[채점 기준]

상	㉠과 ㉡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및 그 의미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과 ㉡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및 그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과 ㉡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만 쓴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17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1**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그렇지 않은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오답 풀이] 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사회권을 기본권에 추가하였으며,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 등을 강조하였다. 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 관계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02**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주권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가)와 (나)는 B와 C에 들어갈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ㄱ.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ㄷ.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헌법 조항은 평화 통일 지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ㄹ.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조항은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 (나) 모두에 들어갈 수 없다.

**03** A는 국제 평화주의, B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이며,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풀이] ㄱ.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국제 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ㄷ.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04**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는 참정권 보장,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있다.

[오답 풀이] ㄴ.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제도 실시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ㄹ.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국제 평화주의에 대한 실현 방안이다.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내신 완성 핵심Q

019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③    07 ③  
08 ①    0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⑤    14 ②  
15~16 해설 참조

**01** 제시된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나타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②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배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권이다.

[오답 풀이] ④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에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프랑스 혁명을 통해 확대된 권리인 (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 침해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이며, (나)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에 해당한다.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는 (다)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다.

**03**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 A는 평등권이다. 우리 헌법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각 개인을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평등권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청구권이다. ③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평등권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04**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평등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오답 풀이]** ① 평등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② 실제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우리 헌법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각 개인을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한다.

**05**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등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갑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A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ㄱ. 자유권은 매우 광범위하여 헌법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포괄적 권리이다. ㄴ.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오답 풀이]** ㄷ.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ㄹ.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06** 제시된 헌법 조항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방어적·소극적·포괄적 권리이다. ㄴ.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풀이]** ㄱ.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로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인정된다. ㄹ.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07** ㉠의 평등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의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으로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 헌법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강조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평등권은 포괄적 권리, 참정권은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08**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ㄱ. 참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ㄴ.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이 포함된다.

**[오답 풀이]** ㄷ.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ㄹ.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09** 제시된 헌법 조항은 사회권과 관련이 있다. 사회권은 소득 재분배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며,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 헌법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최저 임금제의 실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보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ㄷ.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10**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 격차 심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회권이 등장하였다.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사회권은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ㄱ. 사회권은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과 관련 있다. 기본권을 천부 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법상의 권리와 관련 있다. ㄷ.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11** 제시된 사례에서 갑과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청구권과 관련 있다. 갑은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으므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국가의 결빙 도로 방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충 자료]**

청구권의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2** 제시된 표에서 소극적 권리인 A는 자유권에 해당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B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참정권이다. <보기>에서 ㄱ의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ㄴ의 선거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ㄷ의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는 청원권으로 청구권에 해당하며, ㄹ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ㄱ, B는 ㄹ, C는 ㄴ과 관련 있다.

13 같은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이른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실정법상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를 전제로 할 때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연법상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수립 이전부터 인간이 가지는 권리임을 강조한다. ⑤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를 전제로 할 때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같은 기본권이 국가 권력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오답 풀이] ④ 기본권을 천부의 권리로 보는 이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14 제시문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 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로 한정된다. ③ 기본권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 없이 조례나 규칙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 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5 (1) 청구권

(2) [예시 답안]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채점 기준]

상	적극적 권리와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성격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적극적 권리와 수단적 권리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6 (1)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2) 법률

(3) [예시 답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간 경우
하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0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④ 행복 추구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실현되는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다. 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임을 나타낸다.

02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절대적·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며,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을 상대적·실질적 평등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ㄴ. 상대적·실질적 평등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인정한다. ㄹ.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실질적 평등과 관련 있다.

03 제시된 자료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본권은 국가 배상 청구권으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②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④ 청구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⑤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04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형식 측면에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정도에 있어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 중 하나만 위배되어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보충 자료]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써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가능한 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추구하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공익이 더 커야 함

## II 민주 국가와 정부

### 04 민주 국가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내신 완성 핵심Q  025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③ 06 ① 07 ⑤  
08 ② 0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16 해설 참조

**01** 갑국은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을국은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뽑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④ 여소야대 현상은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①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 [보충 자료]

##### 여당과 야당

- 여당: 집권하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다.
- 야당: 집권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 여대야소·여소야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여대야소,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인 상황을 여소야대라고 한다.

**02** (가)는 대통령제이다. 나.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행정부의 각료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하지 못한다. 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오답 풀이]** 가. 대통령제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나.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다.

**03** 밑줄 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로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군소 정당 난립 시 연립 내각이 등장할 수 있다.

**[오답 풀이]** 가.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정부 형태이다. 나.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04** 갑국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하고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고, 을국은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

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⑤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보다 강력한 정책 수행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①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가 수상과 의회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의원 내각제보다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보다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④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책임 정치 구현에 충실하다.

**05** 제시된 갑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오답 풀이]** 가.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치 형태의 특징이다. 나.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06**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다. ⑤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07** 갑국은 내각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어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⑤ 총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으므로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연립 내각 구성이 시도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B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② D당이 연립 정부 구성에 참여한다면 D당에서 행정부 각료가 임명될 수도 있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다.

**08**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②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용이하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 다수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③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보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독재의 위험성이 크다. 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만,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

**09**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병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고, 갑국과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ㄱ. 갑국의 경우 의회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실질적 국정 운영의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이다.

**[오답 풀이]** ㄷ. 병국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ㄹ. 갑국, 을국, 병국 의회는 모두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10**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고, ㉡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으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고, ㉡으로는 의회의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ㄷ.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11** 갑국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원화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담당하게 하는 이원 집정부제이다. ㄷ.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여 정치적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답 풀이]** ㄱ.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이원 집정부제이다. ㄹ. 국가 원수가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보충 자료]**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정부 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도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지지만, 행정권 중 주로 외교와 국방 분야는 대통령이, 일반 행정 분야는 총리가 담당하여 행정권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는 점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는 점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와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2** ㉠에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가미된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의 존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13** (가) 유신 헌법 공포는 1972년, (나)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다) 4·19 혁명은 1960년에 발생하였다. ㄴ. 6월 민주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9차 개헌을 이끌어냈다. ㄷ. 4·19 혁명으로 인해 정당성을 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3차 개헌을 통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도입되었다.

**[오답 풀이]** ㄱ. 유신 헌법 공포로 인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탄생하였다. ㄹ. (다) → (가) → (나)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14**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또한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5** (1) 갑: 의원 내각제, (2) 을: 대통령제  
 (2) **[예시 답안]**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고 독재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채점 기준]**

상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가)에는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관리, 국무 회의를 통한 국정 심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두 가지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하나만 서술한 경우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1**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ㄱ.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보충 자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대통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할 수 없음</li> <li>•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음</li> <li>•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li> </ul>
의원 내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의 총리와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함</li> <li>•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li> <li>•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짐</li> </ul>

**02**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끼리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총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④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다수파가 의회를 장악할 수 없다. 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고 해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지는 않는다.

**03** A는 대통령제만의 특징, B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 C는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이다. 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ㄷ.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이다.

**04** 우리 헌법에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 존재한다. ㄱ. 내각 회의 기구와 유사한 국무 회의의 존재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ㄷ.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ㄹ.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오답 풀이] 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⑤ 19~20 해설 참조

**01**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ㄷ.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개정된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과한 즉시 대통령이 공포한다.

**02**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위원회의 법률안 발의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로 시작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03** 국회는 국회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교섭 단체와 위원회로 구성된다. ㄴ.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한다. ㄷ. 상임 위원회와 교섭 단체는 모두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ㄷ.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04** ㉠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고, ㉡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된 법안이다. ㄱ. 법률안은 정부 또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ㄷ. 국회에서 재의결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 풀이] 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도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ㄹ.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05** ㄱ.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된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ㄷ.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오답 풀이] ㄷ. 국정 감사는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국정 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실시한다.

06 (가)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나)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낸다. ㄱ.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ㄷ.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ㄹ.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07 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ㄷ.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ㄹ.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08 (가)는 국무 회의, (나)는 감사원이다. ④ 국회는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② 정부에 속하는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정책이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한다. ⑤ 감사원은 업무상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09 ㉠에 들어갈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감사원장과 감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①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②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③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국무총리이다. 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10 ㉠에 해당하는 행정부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ㄴ.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ㄷ. 내각 회의 기구와 유사한 국무 회의의 존재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국무 회의의 구성원은 국무 위원이며, 국회 의원도 국무 위원이 될 수 있다. ㄷ.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1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 위원 임명 제청, 국무 위원 해임 건의, 총리령 발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③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④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무 회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12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 위원을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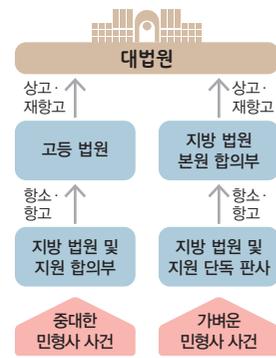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②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③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④ 국회 의원은 행정 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13 삼심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보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대통령 및 국회 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은 단심제를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1심을 맡는다. ㄷ. (가)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라면 (나)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보충 자료]

삼심 제도



3심제에서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고,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이때 1심과 2심은 사실 관계와 법률의 해석을 모두 다루므로 사실심 또는 계속심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3심은 법률의 해석만을 하므로 법률심이라고 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없다. 그리고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한다.

14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헌법 재판소이다. ㄱ. 국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ㄴ.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ㄹ. 국회 의원과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연임할 수 있다.

15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우리 헌법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독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위해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감봉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16** 헌법 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요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ㄱ. 갑은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A는 항소 및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ㄴ.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답 풀이]** ㄷ.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ㄹ.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17** (가)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④ 헌법 재판소는 고위 공직자의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다.

**[오답 풀이]** ①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②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③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을 통해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으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나눌 수 있다.

- 18**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다. 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 19** (1) (가) 교섭 단체, (나) 상임 위원회

(2) **[예시 답안]** 국회가 상임 위원회와 교섭 단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상임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전문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교섭 단체를 통해 국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조율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상	(가), (나)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 (나)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가), (나)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0** (1) (가) 국정 감사권, 탄핵 소추권 등, (나) 법률안 거부권 등, (다)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위헌 법률 심판권 등, (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 등

(2) **[예시 답안]**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국가 기관에 분산하여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상	(가)~(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내용을 넣어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가)~(라)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37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①

- 01** 제시된 자료는 국회의 일정표이다. ⑤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국정 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정 국정 사안을 조사할 때 실시하는 것은 국정 조사이다. ② 교섭 단체는 일반적으로 20인 이상의 소속 국회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원내 단체이다. ③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제안된다. ④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02**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권한 쟁의 심판, (다)는 정당 해산 심판이다. ㄱ. 위헌 법률 심판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ㄴ. 권한 쟁의 심판의 청구자는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이다.

**[오답 풀이]** ㄷ.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구한다. ㄹ. (가)와 (다)는 헌법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만, (나)는 7인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다.

- 03**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헌법 재판소, D는 대법원이다. ①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② 국정 감사권 및 국정 조사권은 국회(A)의 권한이다. ③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D)의 권한이다. ④ 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원(D)에서 담당한다. ⑤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04**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 ㄱ.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가)는 사법부, (나)는 입법부가 된다. ㄴ. ㉠이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면 (나)는 입법부, (다)는 행정부가 되므로, (가)는 사법부가 된다.

[오답 풀이] **ㄷ.** 위헌·위법 명령 및 규칙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가)가 사법부이고, (나)가 행정부라면 ㉠에 들어가야 한다. **ㄹ.**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입법부에서 행사할 수 있다.

## 06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 내신 완성 핵심Q

039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④ 09 ④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②  
15~16 해설 참조

**01** ㉠은 단체 자치, ㉡은 주민 자치이다. **ㄴ.** 주민 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율적인 정치 활동이 중심이 된다. **ㄹ.**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지방 자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지닌다. **ㄷ.** ㉠은 단체 자치, ㉡은 주민 자치를 의미한다.

**02** ㉠은 주민 자치, ㉡은 단체 자치이다. ③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는 모두 지방 자치에 속하므로 지방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민 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②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의 문제에 전문성이 있어 중앙 정부보다 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주민 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 활동이 중심이 되고, 단체 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활동이 중심이 된다. ⑤ 우리나라는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를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03** 밑줄 친 '이것'은 지방 자치이다. **ㄴ.** 지방 자치의 경험을 통해 양성한 민주 시민과 정치 지도자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ㄷ.** 지방 자치는 지방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ㄹ.** 지방 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에 대한 통치권을, 중앙 정부는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다. 이러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력 분립은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지방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강화한다.

**04** (가)는 권력 분립, (나)는 지방 자치이다. **ㄱ.** 우리나라 헌법은 수평적 권력 분립을 위한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ㄷ.**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방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

는 제도로,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ㄹ.** 우리 헌법 제 117조와 제 118조에서 지방 자치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지방 자치 단체를 두는 것은 (나)의 실현 방안이다.

**05** 지방 의회는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사무 처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③ 교육감은 광역 자치 단체에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가 만든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06** (가)는 광역 의회, (나)는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ㄷ.**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오답 풀이] **ㄱ.** 광역 의회(지방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ㄹ.** 기초 의회(지방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07** **ㄱ.** '△△시'의 지방 의회는 기초 자치 단체이다. **ㄹ.** 주민 소환제를 통해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장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에 대한 분쟁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다. **ㄷ.** 주민 발안제인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통해 주민은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08** **ㄴ.**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ㄹ.**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오답 풀이] **ㄱ.**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 속해 있는 시는 ○○ 기초 자치 단체에 해당한다. **ㄷ.** 지방 의회는 의결 기관이다.

**09** (가)는 지방 의회이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10** **ㄱ.** 주민 투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ㄷ.** 주민 소환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 시장은 임기 중에 해임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통해 주민은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ㄷ. ㉠, ㉡, ㉢은 모두 주민이 지방 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보충 자료]**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우리나라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두고 있음)
주민 소환 제도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지역구)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

**11** 밑줄 친 '이 제도'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주민 소환 제도는 비정부 기구의 활동 활성화와는 관계없다. ㉢ 지방 행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 주민 감사 청구 활성화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 확대와는 관계 없다.

**12** ㄷ. 주민 소환 대상에는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이 모두 포함된다. ㄹ.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은 모두 민주적인 지방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답 풀이]** ㄱ. 주민 투표는 지역 주민,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ㄴ. 중앙 정부에 적용되는 주민 소환 형태의 참여 방식은 국민 소환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13** ㄱ. 주민 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ㄴ. 주민 투표는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지방 행정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 ㄷ.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는 모두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지닌 제도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풀뿌리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로,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는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14** ㄱ.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ㄷ.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경우 재정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15** (1) 주민 참여 예산 제도

(2) **[예시 답안]**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된다. 주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대의제가 보완된다. 자의적인 정책 결정이 줄어들어 주민 자치의 원리가 강화된다. 주민의 의사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 등

**[채점 기준]**

상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1) **[예시 답안]**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자기 지역의 이익만 우선 시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채점 기준]**

상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예시 답안]**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 정부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43쪽

01 ㉢ 02 ㉢ 03 ㉡ 04 ㉣

**01** A는 주민 자치, B는 단체 자치이다. ㄴ. 주민 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 활동이 중심이 되고, 단체 자치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행정 활동이 중심이 된다. ㄷ.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는 모두 수직적 권력 분립을 추구한다. 이러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력 분립은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ㄹ.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모두 시행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

**02** 밑줄 친 '이 제도'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이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지방 의회의 입법 기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주민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 발안 제도의 한 형태로, 주민 참여 제도 중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지닌 제도이다.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는 주민 투표 제도이다.

**03** (가)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나)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이다. ㄱ.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 발안 제도의 한 형태로 주민들이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ㄴ. 정치 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습득하고 동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제시된 제도는 모두 주민들의 정치 사회화에 기여한다.

[오답 풀이] ㄴ.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행정적 통제 제도이다. ㄷ.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04** 교사가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답한 학생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갑이 옳은 대답을 했으므로, 병은 옳지 않은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지방세보다는 국세 중심이어서,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적 재원이 부족해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중앙 정부의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부족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 시하는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 III 정치 과정과 참여

#### 07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내신 완성 핵심Q

045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6 ⑤	07 ①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17 해설 참조						

**01** 과거에는 주로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였지만,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은 ㉠이다. ㄴ. ㉠만 정치 과정을 지배자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02** (나)에서는 (가)와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원화된 정치 참여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므로 민주적 정책 결정 행위가 나타났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 행위가 나타났다. ②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권이 높다. ③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나)보다는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가)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⑤ (가)는 하향식, (나)는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

**03**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 과정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므로 투입 과정이 약화된다.

[오답 풀이] ② 정책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부 기관이 담당한다. ③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 지나나 요구를 하는 것은 투입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④ 환류는 전통적인 정치 과정보다 현대 정치 과정에서 더 중시되고 있다. ⑤ 여론의 형성은 투입과 환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보충 자료]

정치 과정의 단계

정치 과정은 투입, 산출,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시민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은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 단계를 투입이라고 한다.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산출 과정을 거친다.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정책이 수정되기도 한다.

**04** 제시문은 정치 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③ 정당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나 요구를 나타내는 투입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정책 결정 기구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이익 집단도 투입 과정에 관여하며, 로비 활동은 이익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는 수단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환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입보다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산출을 중요시한다.

**05** 공청회는 공공 기관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로, 정책의 정당성을 높여 준다.

**[오답 풀이]** ① 공청회 개최는 국가 기관이 아닌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중시하는 정치 과정이다. ② 공청회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권보다 시민의 의사를 고려하는 과정이다. ④ 공청회를 개최하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가)는 투입, (나)는 산출, (다)는 환류에 해당한다. ㄱ. 시민 단체의 누진세 인상 요구라는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투입되고 있다. ㄴ. 정책 결정 기구인 행정부에 의해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이라는 정책이 산출되었다. ㄷ. 선거에서의 패배는 산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므로 환류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ㄷ.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며, 완전 비례 대표제 실시를 주장하는 정당의 활동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므로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07** 제시문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막아 시민의 이익과 공익을 증진하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은 제시문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08** ㄴ.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ㄷ. 국가 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일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오답 풀이]** ㄱ. 선거를 통해 표를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일시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C에 해당한다. ㄷ.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는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B에 해당한다.

**09** 집단적 참여의 방법에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집회·시위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집회·시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의사를 결집하고, 결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론 기관에 투고하는 것은 C에 해당한다. ②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A에 해당한다. ③ 국가 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하는 것은 B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회의 공익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0** (가)는 대중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 (나)는 대중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오답 풀이]** ㄱ. 시민들의 정치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이다. ㄷ. (나)는 무지하거나 소신과 의지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11** ㄱ. 많은 사람들이 커피 파티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함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ㄷ. 커피 파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 해소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커피 파티의 활동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ㄷ. 커피 파티 활동이 대의제를 부정한다는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다.

**12** 선거와 여론을 통한 정치 참여는 모두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하도록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가)와 (나)는 모두 개인적·일시적·합법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⑤ 현대의 민주 정치에서는 (가)와 (나)를 통한 참여를 모두 중요시한다.

**13** 민주적인 정치 과정은 국가 권력과 국민 간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②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나 대중의 정책 결정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③ 제시문은 시민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④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14**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일부 정치 집단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가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오답 풀이]** ㄱ. 시민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다. ㄷ. 일부 정치 집단에 의한 자의적 통치로 인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이 늘어날 것이다.

**15** (1) ㉠ 서명 운동, 입법 청원, 집회와 시위 등, ㉡ 법규의 제정, 각종 정책의 집행 등

(2) **[예시 답안]** 환류는 시행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채점 기준 ]

상	환류의 의미를 국민의 평가와 재투입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환류의 의미를 국민의 평가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환류의 의미를 국민의 평가라는 표현 없이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이익과 공익을 증진하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상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시민의 이익과 공익 증진 측면에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서술하였으나 시민의 이익과 공익 증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서술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7 [예시 답안]** (가)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공무담임권을 행사한다. 국가 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한다. 등 (나)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다. 등

[ 채점 기준 ]

상	(가)와 (나)의 방법을 두 가지씩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와 (나)의 방법을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가)와 (나)의 방법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49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1** (가)에는 '투입 → 산출 → 환류'라는 정치 과정의 단계가 나타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였지만, 현대에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④ 갑국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과정을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는 모두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던 과거의 정치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02** 환류란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단계로, 선거를 통한 정책 평가와 여론을 통한 문제 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던 전통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거 또는 공무원 임용과

정을 거쳐 구성된다. ③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이나 ㉡을 담당한다. ㉢을 담당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이다. ⑤ ㉠의 내용에 반(反)하는 ㉢도 나타날 수 있다.

**03**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관습적·집단적 참여 방법이지만,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비관습적 참여 방법이다.

[ 오답 풀이 ] ㄱ. 노령 연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소속 정당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ㄴ. 여론 조사 기관의 선거 관련 전화 설문 조사에 응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04** (가)의 청원은 개인적 참여 방법, (나)의 시민 단체 활동은 집단적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집단적 참여 방법에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정책 결정이 아닌 투입에 해당한다. ② (나)의 시민 단체 활동은 지속성을 갖는 활동이다. ③ (가)보다 (나)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④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가)와 (나)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08 선거와 선거 제도

내신 완성 핵심Q 051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②  
15~16 해설 참조

**01** 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임기 중 국민의 의사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대표자를 재선임하지 않고 책임을 물어 교체함으로써 대표자 및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02** 1인 1표제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로 보아 지역구 의석수나 득표율을 토대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04년부터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03 평등 선거는 표의 양과 질에 있어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표를 부여하고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04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후보자와의 관계 보다는 공약이나 정강 정책을 중시하는 캠페인으로, 정책과 공약 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대표를 통제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책임 정치를 펼칠 것이며, 정치 과정에서 환류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오답 풀이]** ㄴ.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의제를 전제로 한다. ㄹ.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유권자들은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공약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므로 연고주의에 의한 선거 문화가 개선된다.

05 A는 절대 다수 대표제, B는 비례 대표제, C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③ 절대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오답 풀이]** ① 소선거구에서는 보통 다수 대표제를 사용한다. ② 의회에 군소 정당이 많아질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비례 대표제(B)이다. ④ 단순 다수 대표제(C)와 절대 다수 대표제(A) 모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요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⑤ 절대 다수 대표제(A)가 단순 다수 대표제(C)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06 D당은 B당에 비해 득표수는 적으나 의석수가 더 많아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잉 대표되었다.

**[오답 풀이]** ①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선거구는 '무' 선거구로 1만 표의 사표가 발생하였다. ② 갑국의 선거구 수는 5개, 의석수는 10석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갑' 선거구는 35만 명, '정', '무' 선거구는 각각 7만 명으로,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커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 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7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선거구의 지리적 범위가 비교적 좁아 선거 관리가 쉽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소수당 후보자나 새로운 인물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사표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8 ㄱ. A당의 경우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변경할 안 3석, 현행 2석이므로 변경할 안이 더 유리하다. ㄴ. 선거구 1~3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A당, B당이고 선거구 4~5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A당, C당이다. 따라서 변경할 안에서 두 개의 선거구 모두에서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은 A당이다.

**[자료 분석]**

〈현행〉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1에서 B당, 선거구 2에서 A당, 선거구 3에서 C당, 선거구 4에서 A당, 선거구 5에서 C당이 의석을 얻게 된다.

〈변경할 안〉 선거구 1~3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선거구별 유효 투표 총수(1,500표)의 20%인 300표 이상을 얻은 A당, B당이고, 선거구 4~5에서 의석 할당 정당은 선거구별 유효 투표 총수(500표)의 20%인 100표 이상을 얻은 A당, C당이다. 선거구 1~3에서 A당은 2석, B당은 1석을 배분받고, 선거구 4~5에서 A당, C당은 각각 1석씩 배분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과 변경할 안의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변경할 안
A당	2석	3석
B당	1석	1석
C당	2석	1석
D당	0석	0석
E당	0석	0석

**[오답 풀이]** ㄷ. B당은 현행과 변경할 안의 의석수가 동일하고, C당은 현행보다 변경할 안의 의석수가 감소한다. ㄹ. D당과 E당은 모두 현행과 변경할 안의 의석수가 동일하다.

09 선거구 제도를 변경 후 5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였으므로 ㉠은 소선거구제, ㉡은 중·대선거구제이다. ⑤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오답 풀이]** ① 중·대선거구제가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② 중·대선거구제가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다. ③ 소선거구제는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④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10 ㄷ.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30석(50×0.6),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2석(50×0.04)이다. 따라서 A당의 총 의석수는 80석(50+30), D당의 총 의석수는 9석(7+2)이다. ㄹ. C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27%인 반면 지역구 의석률은 20%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오답 풀이]** ㄱ.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므로 A당이 여당이다. 따라서 여당인 A당의 총 의석수는 80석으로, 전체 150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ㄴ.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23%이고 비례 대표 의석률은 26%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률이 더 높다.

11 A형은 단순 다수 대표제, B형은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 **ㄷ**, 절대 다수 대표제가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선거 운영이 복잡하다. **ㄹ**, 절대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에 유리하다.

[오답 풀이] **ㄱ**, 결선 투표의 가능성으로 인해 절대 다수 대표제가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선거 비용 부담이 크다. **ㄴ**,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는 모두 다수 대표제로 둘 다 양당제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12 만약 갑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A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T와 T+1 시기 모두 여당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T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B당)이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갑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T+1 시기에는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립 내각이 나타날 수 있다. ③ T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B당)이 있으므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⑤ C당은 T+1 시기에 A당 또는 B당과 연합하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할 수 있다. 따라서 C당은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의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13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공직 선거는 크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로 구분된다. ④ 자치구·시·군 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한다.

[오답 풀이] 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 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므로 항상 같은 해에 실시되지 않는다. ② 국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1인 2표제를 통해 정당에 대한 투표에 기초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③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⑤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해당 지역을 단위로 한다.

14 ㉠과 ㉡은 소선거구제, ㉢은 중선거구제, ㉣과 ㉤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ㄱ**,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ㄷ**, 국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1인 2표제를 통해 정당에 대한 투표에 기초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오답 풀이] **ㄴ**,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ㄹ**, ㉣과 ㉤은 모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5 (1) 게리맨더링

(2) [예시 답안] 우리나라에서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써 확정하는 제도인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선거구 법정주의와 그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선거구 법정주의와 그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선거구 법정주의라고만 쓴 경우

16 (1) 선거 공영제

(2) [예시 답안] 우리나라는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 간의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선거 공영제의 목적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선거 공영제의 목적 한 가지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55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①

01 갑국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을국은 비례 대표 의원의 수를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02 선호 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표시한 유권자의 표를 그 유권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자에게 넘긴 후, 다시 표를 집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표를 집계하면, 1차 탈락한 무에게 1순위 투표한 L과 2차 탈락한 정에게 투표한 J, K의 차순위 표가 병에게 주어지면서 3차 탈락자는 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을에게 주어졌던 표를 갑과 병에게 배분하면, E의 표는 갑에게, F와 G의 표는 병에게 주어지면서 7표를 얻은 병이 당선된다.

03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④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오답 풀이] 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어느 국가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②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권한이다. ③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한다. ⑤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04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및 정당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도시에서는 A 정당이, 농촌에서는 B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방안 1>에 따라 경우 A 정당은 도시에서 2석, B 정당은 농촌에서 2석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방안 2>에 따라 경우 도시는 1개의 선거구, 농촌은 3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므로 A 정당은 1석, B 정당은 3석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방안 3>에 따라 경우 모든 선거구에서 B 정당 지지율이 높은 농촌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B 정당이 4석 모두를 획득하게 된다.

**09**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방법

내신 완성 핵심Q  057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①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④	14 ②
15~16 해설 참조						

- 01** (가)에 들어갈 정치 주체는 정당이다. 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주체는 이익 집단이다. 정당은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오답 풀이]** ①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한다. ② 정당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④ 정당은 대표자를 배출하기 위해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 02** A당의 공천 방식은 중앙당의 공천 기구가 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를 결정하는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 방식이며, B당의 공천 방식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 ⑤ B당은 공천 과정에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당은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② A당은 소수의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천이 진행되어 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③ B당은 일반 국민 투표가 후보자 결정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일반인에게 인기가 많은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④ B당보다 A당의 공천 방식이 정당 이념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 03**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어려운 B는 일당제,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C는 다당제, A는 양당제이다. 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오답 풀이]** ② 일당제(B) 아래에서는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③ 다당제(C)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므로 A~C 중 정당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④ 다당제(C)는 양당제(A)에 비해 정당 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낮다. ⑤ 다당제(C)는 정당이 여러 개이므로 집권 가능 정당이 하나뿐인 일당제(B)에 비해 집권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 04** 오픈 프라이머리는 폐쇄적인 정당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폐쇄적인 정당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①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인기에 영향을 공약이 남발되거나 정당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후보자로 선출되고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05** 정당 조직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소수의 당 지도층이 정당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 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일반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각 정당이 이념과 비전을 갖춘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답 풀이]** ㄹ. 정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따라서 당원의 이익 추구를 정당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06**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참여 민주 사회 건설’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제시된 정관과 관련 있는 정치 참여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④, ⑤ 공약을 개발하고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 07** 회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A는 특수 이익,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B는 공적 이익이다. 따라서 A를 추구하는 단체는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 단체라고도 한다.  
**[오답 풀이]** ① 이익 집단은 자체적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 ② 시민 단체 및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시민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 08**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이다. 따라서 (가)에는 이익 집단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이익 집단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정당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정당과 이익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보충 자료]**

이익 집단과 정당의 비교

구분	이익 집단	정당
활동 목적	특수 이익 실현	정권 획득
관심 분야	소속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정강 실현,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문제
선거에서의 역할	선거에서 후보 지지 및 후원	선거에 후보자 배출 → 정치적 책임을 짐

09 A 단체는 노동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이고, B 단체는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복지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 단체는 정치,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④ 로비 활동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10 시민 단체는 공공선을 추구나,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공통점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이다.

[ 보충 자료 ]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비교

구분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 추구</li> <li>도덕성 중시</li> <li>비영리적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 이익 추구</li> <li>직업적 이해관계 일치</li> </ul>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의 정치의 한계 보완</li> <li>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li> <li>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li> <li>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li> <li>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 수행</li> </ul>	

11 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추구하는 A 집단은 이익 집단,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B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치 과정의 산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이다. 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여론을 집약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12 (가)는 언론이 사회에서 의논할 만한 문제를 정하여 전달하고 해설·비판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언론이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언론이 지도자나 엘리트층에게 유리한 조작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본다. ③ (다)는 언론의 공정한 여론 형성 및 주도,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언론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본다. ⑤ (다)는 언론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13 언론은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확한 여론 조사를 통해 민의를 보도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언론 보도를 모조건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용해야 하며 자기 견해를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보충 자료 ]

침묵의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일치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키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

14 제시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기사의 편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15 (1) (가) 시민 단체, (나) 이익 집단

(2) [예시 답안] (가)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일부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과 후원에 의존할 경우 시민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나) 이익 집단의 경우 집단의 특수 이익이 공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로 나타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상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활동의 한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활동의 한계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활동의 한계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시민들은 언론이 전달하는 여러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상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수용 태도를 가지지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하	언론에 대한 바람직한 수용 태도를 서술하였으나 비판적 수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01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주체는 정당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오답 풀이] ① 정당은 다른 정치 주체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대중 매체를 통해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③ 로비 활동, 정치 후원금 제공 등의 방법

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④ 정당을 비롯하여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등 다른 정치 주체들도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02** 갑국은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 을국은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가 나타나고 있다. 양당제는 정국이 안정되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당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오답 풀이] ㄱ. 양당제는 정단 간 대립 발생 시 중재가 어렵다. ㄷ.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무시되기 쉬운 것은 양당제이다.

[보충 자료]

정당 제도의 유형		
일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있는 것</li> <li>독재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li> </ul>	
복수 정당제	양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li> <li>정국 안정에 기여,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li> <li>다양한 의견 반영 곤란, 다수당의 우려, 양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려움</li> </ul>
	다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li> <li>다양한 의견 반영, 소수의 이익 보호, 정단 간 대립 시 중재 용이</li> <li>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 우려,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li> </ul>

**03** ㄱ.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이다. ㄷ.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ㄹ.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는 ㄱ, (나)에는 ㄴ, ㄷ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04** 일정 시한을 정하여 언론 기관이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도 유예 요청 또는 엠바고(embargo)라고 한다. 이는 사생활 보호나 국익의 보호 등 알 권리의 유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엠바고가 정치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오답 풀이] ㄷ.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는 제시된 내용과 관련 없다. ㄹ. 엠바고는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신속한 보도를 저해할 수 있다.

# IV 개인 생활과 법

## 10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내신 완성 핵심Q

063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16 해설 참조

**01**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구분한 (가)는 공법, (나)는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③ 은행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개인 간의 재산 관계 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① 소송법은 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공법에 해당한다. ⑤ 공법은 어겼을 경우 형벌이나 벌금 등의 공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사법에 비해 제재가 더 엄격하다.

**02** 자료의 A는 민법이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私法)으로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며, 재판에서 재판의 기준이 된다.

[오답 풀이] ㄹ.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형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03**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ㄹ.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오답 풀이] ㄱ.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사유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화된다. ㄷ.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04** 제시된 두 법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도 무효이다.

[오답 풀이] 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⑤는 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05** 법원은 을 기업이 배출한 가스의 농도는 관련법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가스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며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오답 풀이] ①은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②는 계약 자유의 원칙, ③은 계약 공정의 원칙, ⑤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06 (가)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 (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모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들이다. ㄱ. (가)에 따르면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은 인정될 수 없다. ㄴ.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한 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공정성 유무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ㄷ. 사업주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ㄹ.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모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들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에 근거한다.

07 A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08 학원들의 불명확한 환불 조건, 환불 결정 사안의 주관적 판단 등은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밑줄 친 '시정 명령'의 근거가 된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오답 풀이] ①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③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는 과실 책임의 원칙, 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이다.

09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의 책임, 제조물 책임은 모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0 제시된 헌법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ㄱ. 제시된 헌법 조항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관련 있다. ㄷ. 개인 소유의 재산보다 국가 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찾을 수 없다.

11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고, 무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업자의 환경 오염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2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ㄷ. 현대 사회에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오답 풀이] 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타인이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국가 소유의 재산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ㄹ. 제조물 생산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타인의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제조물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등에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병존하여 적용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14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ㄱ.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ㄴ.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 자유의 원칙은 전제가 된다.

[오답 풀이] ㄷ.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ㄹ. 수정·보완된 민법의 원칙도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15 (1) 무과실 책임의 원칙

(2) [예시 답안] 제1조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는 부분과 제6조 제1항의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된 법 조항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된 법 조항을 이용하여 않고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6 (1) 계약 공정의 원칙

(2) [예시 답안] 제시된 약관의 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A 위원회는 계약 공정의 원칙을 들어 ○○ 회사에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을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계약 공정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된 사례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계약 공정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된 사례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계약 공정의 원칙을 도출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67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1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과 사법(私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에서 갑을 포함한 두 사람이 옳은 대답을 하였으므로, A는 공법, B는 사법이다. 병이 제시한 사례는 공법의 사례로 병은 틀린 대답을 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이 옳은 대답을 하였고, 정은 틀린 대답을 하여야 한다. 나. 재산 관계, 가족 관계는 민법의 주요 내용이며,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 라. 사법에 비해 공법의 제재 수단이 더 엄격하다.

[오답 풀이] 가. 형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다. 은행으로부터 주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02 ㉠은 계약 공정의 원칙, ㉡은 소유권 절대 원칙, ㉢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은 과실 책임의 원칙, ㉤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침해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현대 사회에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인정된다. ② 소유권 절대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은 후 현대 사회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병존하여 적용되고 있다.

03 사례에서 대법원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 정책 기본법에 따라 ○○ 철도 시설 공단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오답 풀이] ①은 계약 자유의 원칙, ②는 소유권 절대 원칙, ③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④는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04 제시된 사례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한 것이고, 개발제한 구역 지정이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가)는 계약 공정의 원칙, (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11 재산 관계와 법

내신 완성 핵심Q 069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16 해설 참조

01 가.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 라. 계약 성립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며, 채무 불이행 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풀이] 나.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다.

02 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하며, (나)에서 갑과 을의 냉장고 구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다. 계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나) 이후 갑에게는 냉장고를 받을 권리와 냉장고 값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며, 을에게는 냉장고 값을 받을 권리와 냉장고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라. (나) 이후 을이 냉장고를 배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을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 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다.

[오답 풀이] 가. 을의 청약과 갑의 승낙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된 것은 (나)에서이다.

03 가. 금전 대차 계약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이다. 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라. 계약 성립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다면 을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오답 풀이] 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하므로, 갑과 을이 계약 내용에 합의한 2019년 3월 31일에 금전 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

04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자료 분석 ]

구분	갑	을	병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	아니요
제한 능력자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갑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갑이 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효한 계약이다. 을은 의사 능력은 있으나 제한 능력자이므로 을의 계약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병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병의 계약은 무효이다.

[ 오답 풀이 ] ① 갑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모두 있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③ 병은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병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은 의사 능력을 의미한다.

05 ㄱ.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질문자는 갑으로부터 뷔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ㄴ. 질문자는 A 출장 뷔페 사장인 갑의 채무 불이행(갑이 제시간에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손해(제시간에 뷔페를 이용하지 못한 것)를 입었다. ㄷ. 질문자는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ㄹ. 갑에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6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③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07 ㄴ. 미성년자도 용돈을 사용하는 행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ㄷ. 동의를 위조하는 등의 사술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및 법정 대리인 모두 취소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ㄱ.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이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08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으로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 없으며,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가)는 무효, (나)는 취소에 해당한다. ㄱ, ㄷ. 의사 능력이 없는 갑이 체결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ㄴ. 미성년자인 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은 사술에 의해 체결한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계약이다.

09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을 또는 을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법정 대리인인 을의 부모가 반대한다면 계약은 취소된다.

[ 오답 풀이 ] ①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의 부모는 을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면 을과 을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10 불법 행위는 위법성이나 책임 능력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ㄷ.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별도로 위자료라고 부른다.

[ 오답 풀이 ] ㄱ.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ㄷ.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 능력이다. 책임 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보충 자료 ]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정당방위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긴급 피난	자기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11 ㄱ. 심신 상실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책임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ㄴ, ㄷ.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감독자 본인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책임 무능력자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ㄷ.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12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을과 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과 병의 감독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③ 을과 병의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갑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갑이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과 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과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정의 부모는 을과 병의 부모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갑, 을, 병이 정에게 행한 불법 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 을, 병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을과 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을과 병의 부모와 갑이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 13 을은 갑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을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증명받거나 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을이 갑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4 첫 번째 사례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배상 책임, 두 번째 사례는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다. ㄱ. 병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인 갑에게 있다. ㄴ. 공작물의 점유자인 갑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공작물의 소유자인 을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ㄷ. B는 A에게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동물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애완견의 점유자인 A가 애완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A는 애완견의 주인이 아니라도 B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15 (1)

구분	권리	의무
갑	1년 후 을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을 권리	현재 갑에게 1,000만 원을 줄 의무
을	현재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권리	1년 후 갑에게 1,100만 원을 줄 의무

(2) **[예시 답안]** 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권리만을 얻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병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나)의 계약 성립 사유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16 (1) (다), (라)

(2) **[예시 답안]** (나)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라)의 경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채점 기준]**

상	(나)와 (라)를 구분하여 손해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나)와 (라) 중 한 가지 경우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73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④

- 01 ㄴ. (나)에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이루어져 에어컨 구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ㄷ. (라)에서 을은 갑이 선택한 모델을 보내지 못했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에어컨 구매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 갑의 에어컨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은 (나)에서 이루어졌다. ㄷ.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02 갑은 을에 대한 사무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ㄴ. 을은 17세로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을의 행위는 과실이었으며, 위법성이 있고, 을의 행위로 인해 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을의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고, 을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 03 A의 경우 미성년자가 사술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① 미성년자가 사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계약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⑤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04 첫 번째 사례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두 번째 사례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과 관련 있다. ④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모두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을이 주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③ 을이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인 병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⑤ 양에게 물린 원인 제공을 C가 하였다면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과실 상계라고 한다.

[보충 자료]

과실 상계

가게 주인이 가게 앞 인도를 쓸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옷을 더럽히게 되었는데, 행인이 스마트폰을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앞도 보지 않고 걷고 있었다면 더럽혀진 옷 세탁비의 100%를 가게 주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걷고 있었던 행인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탁비 2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만약 가게 주인의 잘못이 60%이고, 행인의 잘못이 40%로 인정되면 가게 주인은 12,000원을 부담하고 행인은 8,000원을 부담함으로써 각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어느 일방의 전적인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 대부분은 쌍방의 과실이 섞여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추정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데, 이처럼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것 또는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것을 과실 상계라고 한다.

12 가족 관계와 법

내신 완성 핵심Q

075쪽

- 01 ④
  - 02 ⑤
  - 03 ③
  - 04 ⑤
  - 05 ④
  - 06 ①
  - 07 ③
  - 08 ⑤
  - 09 ③
  - 10 ①
  - 11 ②
  - 12 ④
  - 13 ⑤
  - 14 ④
- 15~16 해설 참조

01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가)는 법률혼,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는 사실혼이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나.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에서 배우자 간 일상 가사 대리권과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02 18세인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과 혼인하여 혼인 신고까지 마쳤으므로, 갑과 을은 성년 의제되며 법률혼 관계이다.

A와 B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친자 관계가 형성되므로, 무조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8세 미성년자의 혼인 시 양쪽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의 부모도 갑과의 혼인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②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혼인 신고 후 성년 의제된 갑과 을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소멸된다. ③ 민법에서는 18세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한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사실혼 관계에서의 친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형성된다.

[보충 자료]

성년 의제의 효과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아이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성년 의제 효력이 생기는 혼인은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에만 해당한다. 일단 미성년자가 결혼하여 성년으로 의제가 되면 그 후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년 의제는 민법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 이외의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공직 선거법」 등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공직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함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다.

03 자료에 '재판 확정 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재판이 확정되면 발생한다. 따라서 재판 확정 일자인 2019년 8월 23일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풀이]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 법원의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이혼 신고를 한다. 따라서 갑은 관할 행정 기관(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④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 적용된다. ⑤ 이혼의 책임이 있더라도 을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4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법원의 판결로써 가능하다. 사례에서 갑의 부정행위로 을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갑의 부정행위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18세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할 수 있다. ②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④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이혼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다만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접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

**05** 이혼 속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이다. 따라서 병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갑과 을은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② 법률혼 관계인 갑과 을 사이에서 출생한 병은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③ 이혼에 대한 합의는 협의상 이혼의 요건에 해당한다. ⑤ 협의상 이혼의 경우 가정 법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06** (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협의상 이혼이다. (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재판상 이혼이다. ① 협의상 이혼을 위해서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②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에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07** 주식 투자를 위해 을이 빌린 1,000만 원은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가사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을이 단독으로 갚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하나뿐인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협의상 이혼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갑과 을은 1개월의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시골에 사 둔 땅은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므로 갑과 을의 공유 재산에 해당한다. ④ 갑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이므로 을도 갚을 의무가 있다. 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을이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08** 민법 제867조와 제882조의 2에서 가정 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입양자의 지위를 친생자와 같도록 규정한 것은 모두 입양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09**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되지 않지만,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된다.

**[오답 풀이]** ①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④ 친자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⑤ 가정 법원을 상대로 한 친양자 입양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10**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하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풀이]** 병,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정,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보충 자료]**

**친권 상실 사유**

- 부 또는 모의 친권 남용이 있을 때
  - 예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행하는 경우 등
-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 예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 상습 도박 등
-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예 행방불명, 정신 병원에 장기 입원, 구치소 복역 등

**11** ㄱ.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따른 뒤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법정 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다.

**[오답 풀이]** ㄴ. 유언장은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유언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다. ㄷ. 법정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다. 직계 존속은 2순위이다.

**12** 제시문의 두 판결은 공통적으로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유언은 사망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 된다. 유언의 방법에는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각각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다.

**13** ㄷ.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모든 것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한 (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ㄴ. 유언장은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작성한 (나)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다.

**[오답 풀이]** ㄱ.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장을 작성한 갑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ㄴ. 갑의 배우자는 전 재산을 장남인 을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14** 갑이 남긴 재산은 채무를 제한 7억 원이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갑의 직계 비속인 병, 정과 배우자인 을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하므로, 병과 정은 상속액은 각각 2억 원(7억 원×2/7)이고, 을의 법정 상속액은 3억 원(7억 원×3/7)이다. ④ 병의 법정 상속액은 2억 원이고, 을의 법정 상속액은 3억 원이므로 병의 법정 상속액은 을의 법정 상속액의 50%보다 많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③

[오답 풀이] ①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 병, 정이 있으므로 상속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인 무는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③ 병과 정 의 법정 상속액의 합은 4억 원이고, 을의 법정 상속액은 3억 원이다. ⑤ 유언장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갖는다. 평소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만 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 될 수 없다.

15 (1)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2) [예시 답안] 부모 동의하에 혼인한 18세의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행위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한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성년 의제의 의미와 함께 성년 의제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성년 의제의 효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한 경우
하	성년 의제라고만 쓴 경우

16 (1) [예시 답안] 갑의 재산 7억 원을 을, 병, 정이 각각 3억 원(7억 원×3/7), 2억 원(7억 원×2/7), 2억 원(7억 원×2/7)씩 상속받고, 병의 재산 8억 원(6억 원+2억 원)을 직계 존속인 을이 모두 상속받는다. 따라서 을의 상속액은 11억 원이다.

[채점 기준]

상	갑의 재산 분배 후 병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상속 금액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갑의 재산 분배 후 병의 재산을 분배하였으나, 상속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하	갑과 병의 재산 분배 순서도 틀리고, 상속 금액도 잘못 계산된 경우

(2) [예시 답안] 병의 재산 6억 원을 직계 존속인 갑, 을이 각각 3억 원씩 상속받고, 갑의 재산 10억 원(7억 원+3억 원)을 을과 정이 각각 6억 원(10억 원×6/10), 4억 원(10억 원×4/10)씩 상속받는다. 따라서 을의 상속액은 9억 원이다.

[채점 기준]

상	병의 재산 분배 후 갑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상속 금액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병의 재산 분배 후 갑의 재산을 분배하였으나, 상속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하	갑과 병의 재산 분배 순서도 틀리고, 상속 금액도 잘못 계산된 경우

01 (가)는 협의상 이혼, (나)는 재판상 이혼이다. ④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오답 풀이] 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 ②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하다. ③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A는 친생자, B는 친양자, C는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이다. ㄱ.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친양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한 순간부터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ㄴ.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오답 풀이] ㄴ. 친양자나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도 양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권이 있다. ㄹ.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03 A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는 친양자로 입양된 D와 다른 집으로 일반 입양된 G이다. 이혼한 전처 B와 2순위 직계 존속인 노모 E는 법정 상속권이 없으며, 다른 집으로 친양자 입양된 F도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정 상속권이 없다. C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이므로 법정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D와 G가 각각 7억 원씩 A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04 ㄱ.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2순위 직계 존속인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병, 정, 무 모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ㄷ.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병, 정, 무 모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을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므로, 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갑의 재산은 14억 원이다.

[오답 풀이] ㄹ.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상속 1순위인 정, 무와 배우자인 병이 공동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병은 6억 원, 정과 무는 각각 4억 원씩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은 정과 무의 상속액의 합인 8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 13 형법의 이해

내신 완성 핵심Q  081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②
08 ②	0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③
15~16 해설 참조						

**01**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범죄의 정도를 넘는 형벌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02** 제시문의 A는 죄형 법정주의이며, ㉠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죄형 법정주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범죄인에게도 적용된다. ㉡.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불문법인 관습에 의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0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A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유추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04**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자신에 대한 위급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멈추기 위해 을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A는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B의 집 대문을 부수었으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05** 소방법 같은 자신이 질식될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을의 집 창문을 부수었다.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정당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이다. ④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구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06** ㄱ. 형법에서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범죄 행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상실자인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병의 행위는 청구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A를 체포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자구 행위는 국가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ㄴ. 을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ㄷ.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다만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고,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7** ㄱ.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ㄷ.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ㄴ.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에 해당한다. ㄴ.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나 책임이 감경되어 형벌이 감경된다. 따라서 ㉠, ㉢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08** 판사 A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무죄로 판단했고, 판사 B는 을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②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의 상태인 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등을 책임 조각 사유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여부를 언급한 것이다. ③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④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형의 감경 사유일 뿐이다. ⑤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로, 을의 행위가 무죄가 된 사유와 동일하다.

**09** 갑이 지하 주차장에 불을 내고 도망가는 현행 범인인 을을 체포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료 분석]

- **형법 제276조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하면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형사 소송법 제212조에서는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 풀이]** ④ 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갑은 이미 위법성이 조각된 상황이므로 책임 조각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⑤ 갑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10** (가)의 쟁점은 갑이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나)의 쟁점은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행위에 따른 책임 조각 여부, (다)의 쟁점은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이다. ⑤ 을과 병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고, 병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갑이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② (나)에서는 을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③ (다)에서는 병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이었다. ④ 법원은 갑이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1** (가)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는 범죄가 성립된다. ㄱ.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ㄷ. 부당한 침해에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ㄴ. 심신미약 상태는 책임 감경 사유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ㄴ. 갑이 형사 미성년자라면 책임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12**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데, 이를 형벌이라고 한다. ㄷ. 명예형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벌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이에 해당한다. ㄴ. 재산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로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되는 형벌이며, 몰수는 범죄 행위에 이용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형벌이다.

**[오답 풀이]** ㄱ. 생명형에 해당하는 형벌에는 사형만 규정되어 있다. ㄴ.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으며,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13**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인 A는 보안 처분이다. ㄴ. 보안 처분에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이 있다. ㄷ. 보안 처분도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이므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ㄴ. 보안 처분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14** 보안 처분 중 (가)는 치료 감호, (나)는 사회봉사 명령, (다)는 보호 관찰에 해당한다. ③ 보호 관찰은 범죄자가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을 때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오답 풀이]** ① 치료 감호의 집행 기간도 형벌의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② 사회봉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 보안 처분은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⑤ 범죄인의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벌이다.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를 위한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15** (1) 책임

(2) **[예시 답안]** 사례에서 갑이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갑이 심신 상실자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법원의 판단 이유를 '심신 상실자', '책임 조각'이라는 내용을 모두 넣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법원의 판단 이유를 '심신 상실자', '책임 조각'이라는 내용을 넣어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심신 상실자', '책임 조각'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6** (1) A 형벌, B 보안 처분

(2) **[예시 답안]**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구금하는 형벌인데, 징역은 정역을 부과하며 금고와 구류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상	징역, 금고, 구류를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징역, 금고, 구류를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술하였으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하	징역, 금고, 구류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지 않은 경우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1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등의 파생 원칙이 있다. ④ 재판 중 형법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뀔 경우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보충 자료]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이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02 ㄱ. 자녀를 물려고 하는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것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ㄴ.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ㄷ. 심신 미약자인 정은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된다. 다만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되어 그 형이 감경된다. ㄹ.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정은의 행위만 범죄로 성립된다.

03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범죄 성립의 3요소라고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심신 미약자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로 성립되어 D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현행 범인을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한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B). ②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C). ③ 친구의 허락으로 친구 아버지의 지갑을 훔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된다(D). ④ 고객의 요청으로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범죄가 성립된다(D).

04 ㄱ.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ㄴ. 벌금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며 구금

되지 않는다. ㄷ.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의 일종으로 심신 장애, 알코올·마약 중독 상태인 범죄자에게 형벌 집행 전에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ㄹ. OO 고등 법원과 1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A씨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4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16 해설 참조

01 ㄷ. 집행 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구금되지 않는다. ㄹ. 피의자는 기소 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오답 풀이] ㄱ. 체포나 구속은 모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 (나) 모두 갑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기소된 후에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02 그림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이다. 국민 참여 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의 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배심원의 판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03 ㄱ.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ㄴ.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다. ㄷ. 구속 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담당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는 법관이 담당한다.

[오답 풀이] ㄷ.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04 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ㄷ.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일 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기소 유예 처분은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피의자의 성품이나 행실 및 동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는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절차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갑, 을, 병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05**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수사·심판하고 신고된 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한다.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로 구분된다. 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구속 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담당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는 법원이 담당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절차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되므로, 갑은 (가), (나) 단계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일 때 할 수 있다. 갑은 기소 후 구속 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했을 것이다. ④ 형사 재판은 3심제이므로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상소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06**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따라서 갑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갑은 구금되지 않고 석방된다.

**[오답 풀이]** ② 가석방은 모범 수형자를 심사를 통해 석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병은 구금되지 않으므로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므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기소 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을, 정이 기소 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⑤ 갑, 을 모두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갑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보상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7** ㄱ.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은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판사는 갑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ㄷ. 수사 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다)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08** A는 선고 유예, B는 집행 유예, C는 실행 선고, D는 무죄 선고이다. ⑤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는 보호 관찰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집행 유예(B)이다. ② 실행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구금되지 않는다. ③ 무죄라고 하여 무조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어야 한다. ④ 선고 유예(A)에 비해 집행 유예(B)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범죄가 일반적으로 중(重)하다.

**09**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④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된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절차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된다.

**10** ㄴ. 갑은 14세 미만으로 병과 달리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며,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병에게만 내릴 수 있다. ㄷ. 을은 14세 미만으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갑과 을은 모두 14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 처분만 가능하며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ㄴ. 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형벌과 보호 처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보충 자료]**

**소년 사건의 처리**

소년법상에서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소년이 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수사 기록, 증거물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없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

만약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이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죄가 중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일반 법원에 기소한다. 또한 검사는 죄가 가벼울 때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 보호 처분 및 형벌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다.

**11** 갑은 기소될 수 없는 연령이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고, 을~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오답 풀이]** ① 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다. ②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대해 가하는 보안 처분으로, 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죄가 가벼워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다. ③ 형의 선

고에는 형벌을 받는 실형 이외에도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 등이 있으므로, 병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무조건 무죄 판결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④ 을~정의 연령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각각의 연령을 구분할 수는 없다.

**12** 자료의 (가)는 구속 적부 심사이다. ㄱ.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에 의해서도 청구될 수 있다. ㄴ.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갑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지 갑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 풀이]** ㄴ. 구속 적부 심사는 갑이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소 후 구속 단계에서는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ㄷ.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이 위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구속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

**13** 갑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고, 병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ㄴ.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일 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 후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ㄷ.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오답 풀이]** ㄱ. 피의자인 갑이나 피고인인 병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ㄷ. 피의자인 갑이나 피고인인 병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갑은 범죄 피해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및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배상 명령 제도인데,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 손해 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15** (1) ㉠ 형사 보상 제도, ㉡ 명예 회복 제도  
(2) **[예시 답안]** 명예 회복 제도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로 재판이 확정된 때,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점 기준]**

상	'무죄 판결의 재판서',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 게재'라는 말을 언급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무죄 판결의 재판서',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 게재'라는 말을 언급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무죄 판결의 재판서',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 게재' 중 하나만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16** (1) **[예시 답안]** 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말을 언급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말을 언급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소년법상 보호 처분' 중 한 가지의 내용만 서술한 경우

(2) **[예시 답안]** 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이므로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이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검사는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일반 법원에 기소하여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상	'형벌 부과 가능',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말을 언급하여 을의 형사 절차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형벌 부과 가능',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말을 언급하여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형벌 부과 가능', '소년법상 보호 처분' 중 한 가지의 내용만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91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1** 갑은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 국가에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오답 풀이]**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청구하는 것이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소 전, 기소 후 모두 갖는다. ③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모두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를 한 재판 당사자가 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④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더라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02** 국민 참여 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ㄷ.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이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 ㄴ. 배심원들은 갑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결정하였다. 이는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오답 풀이]** ㄱ.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의 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ㄴ.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사례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03** 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형벌과 보호 처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검찰로 송치된 소년에 대해 검사는 가정 법원 소년부 송치, 기소 외에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갑이 13세라도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사 후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③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항고, 재항고이다. ④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갑이 실형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된다. 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은 일반 법원에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04** 갑은 고등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의 고소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된다. ⑤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각각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죄이지만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갑의 수사가 시작되면 갑은 피의자가 되며, 만약 기소되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②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갑은 무죄로 불기소 처분된다.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 하나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갑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④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기소 전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15 근로자의 권리

### 내신 완성 핵심Q

093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⑤  
 15~16 해설 참조

**01**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 교섭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근로 3권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르.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오답 풀이]** 가. 단결권은 근로자만 행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02** (가)에서는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였다. (나)에서는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였으므로 단결권을 침해하였다.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 측과 교섭하여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운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03**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근로자의 복지 등과 같은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인정된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정치 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불법 쟁의 행위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04** 제시된 노동법은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 기준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개선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 법이다. ②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하면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③ 근로 시간이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⑤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05** 가.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나.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나 정확한 지급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나.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하였다더라도 ㉠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무효이다. 르. ㉡~㉣ 중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만 무효이며, 무효로 된 조항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06** 제시된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사회법의 일종이다. 가. 단결권은 근로 3권으로 근로자에게만 인정된다. 사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와 같은 형태의 쟁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르. 노동법은 국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법이다.

**[오답 풀이]** 나. 단체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 07 (가)는 근로 기준법, (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④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08 ㄱ.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결권 침해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혼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갑을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부당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ㄹ.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의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곧바로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부당 해고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도 있다.
- 09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 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②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 당사자만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결 이후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⑤ 행정 소송은 반드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한다.
- 10 갑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고, 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ㄱ.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ㄷ.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 11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행정 법원이 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 당사자만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

청한 당사자는 ○○ 버스 회사일 것이다. ④ 갑에 대한 해고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와 1심 법원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⑤ 1심 법원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2심 법원의 판결은 갑의 항소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 12 ㄱ.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일한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50%를 받는다.'라는 조항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며, 근로 기준법에도 어긋나므로 무효이다. ㄷ. 무효로 된 조항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1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이다. 을은 19세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ㄹ. 근로 계약서상 을의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이라면, 휴게 시간을 빼고 1일 8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에 적합하다.
- 13 갑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갑은 항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법원은 노동 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지방 노동 위원회도 부당 해고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갑일 것이다. ③ 갑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반드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④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해당 근로자만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당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4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취업 동의서는 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에게 필요하다. ② 근로 계약의 체결과 달리 임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청소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다. ③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④ 청소년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보충 자료]
- 연소자 사용 금지 직종**  
 사용자는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연소자에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업종의 운전 및 조종, 청소년 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 등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교도소 또는 정신 병원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에서도 연소자 사용이 금지된다.

15 (1) ㉔ 근로 시간, ㉕ 임금 및 지급 방법

(2) [예시 답안] ㉔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 포함 9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8시~17시(휴게 시간: 13시~14시)'로 고쳐야 한다. ㉕의 임금은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방법은 '매월 20일에 을의 통장에 직접 입금' 등으로 고쳐야 한다.

[채점 기준]

상	㉔과 ㉕의 내용이 잘못된 이유를 제시하고, 두 가지 모두 바르게 고쳐 서술한 경우
중	㉔과 ㉕의 내용이 잘못된 이유를 제시하고 두 가지 모두 고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㉔과 ㉕의 내용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연소 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연소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채점 기준]

상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등급 공략 핵심Q 097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1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 계약서는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근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밑줄 친 ㉔의 헌법 조항은 노동관계라는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③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 ⑤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근로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02 매달 중순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 지급일이 정확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을이 1일 10시간 근무했다면, 정규 근로 8시간과 연장 근로 2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연장 근로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으므로, 연장 근로 2시간의 시간당 임금은 15,000원이다. 따라서 정규 근로 8시간 80,000원에 연장 근로 2시간 30,000원을 더하면 을의 1일 임금은 110,000원이다. ③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하더라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 시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03 나. 갑은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가.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 라.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04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임금은 법정 대리인이 아닌 연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연소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연소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 서류와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연소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 16 국제 관계와 국제법

내신 완성 핵심Q  99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② 06 ② 07 ①  
 08 ②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16 해설 참조

01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 개혁을 둘러싼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이를 계기로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ㄷ.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이념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오답 풀이] ㄴ. 국제 연맹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 평화와 국가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국제 연합이 설립되었다. ㄹ. 냉전의 종식 이후 오히려 민족, 종교, 영토 등에 따른 국지적 분쟁은 증가하였다.

02 국제 관계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갈등하는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제시문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 갈등과 협력 관계가 나타나 있다.

[보충 자료]

국제 관계의 특징

- ① 독립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함
- ②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 국제 문제나 국가 간 갈등의 해결이 어려움
- ③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
- ④ 국제 규범과 힘의 논리가 공존함
- ⑤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함

03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평화를 실현하려면 국제 사회의 여러 세력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오답 풀이]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효과적으로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구축한다고 보는 것은 (나)의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평화가 국가 간 힘의 균형보다 집단 안보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④ 국제 관계에는 도덕과 이성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가)의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⑤ 국제 관계를 이기적 존재인 국가들 간의 투쟁의 장이라고 보는 것은 (가)의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04 미국은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나라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트루먼 독트린(1947)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냉전 체제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오답 풀이] ①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서유럽의 경제 회복을 위한 마셜 플랜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냉전 체제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③, ④ 냉전 체제는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와 미국과 중국의 수교, 제3 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⑤ 냉전 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동서 협력을 선언한 몰타 선언(1989) 이후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막을 내렸다.

05 1960년대 이후를 데탕트 시기라고 한다. 데탕트는 원래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 관계의 대립이 완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냉전을 완화하는 정책 및 그러한 경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중국과 소련의 갈등, 독자 노선을 추구한 프랑스의 소련 및 동유럽에 대한 접근, 미국 정상의 중국 방문 및 닉슨 독트린, 제3 세계 비동맹 세력의 부상 등이 이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다.

[오답 풀이] ① 이념에 기초한 진영 간의 대립이 강화된 것은 냉전 시대이다. ③ 냉전 체제가 붕괴되어 이념보다 실리가 중시된 것은 데탕트 시기 이후이다. ④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과열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이다. 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주권 국가가 국제 관계의 중심이 되는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냉전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이다.

06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침략 전쟁 방지와 국가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오답 풀이] ① 제3 세계 국가들이 부상하게 되는 것은 냉전이 완화되는 D 시기이다. ③ 전 세계에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로 A 시기이다. ④ D 시기는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⑤ E 시기는 탈냉전 시기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념 문제에서 실리 중심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07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적 행위 주체인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를 맞아 그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08 (가)는 국가, (나)는 초국가적 행위체, (다)는 국가 내부 행위자, (라)는 영향력 있는 개인이다. ②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를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하며,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국가이다. ③ 국제 비정부 기구는 개별 시민들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로 초국가적 행위체인 (나)에 해당한다. ④ 국제 연합의 전직 사무총장은 국제 관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라)에 해당한다. ⑤ 국가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09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의료 봉사 활동과 관련한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① 가장 기본적인 국제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③ 국제 행위 주체 중 주권을 갖는 집단에는 국가만 해당한다. ④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연합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⑤ 국제 연합과 국경 없는 의사회는 초국가적 행위체로 분류할 수 있지만, 두 기구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 볼 수는 없다.

10 국제법과 관련하여 같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음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①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요인을 통한 국제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② 국제 사회를 공통의 규범이 존재하기 어려운 무정부 상태로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③ 집단 안보 체제와 같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11 국제법은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을 말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 입법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 사회는 법을 집행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법의 집행이나 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③ 국제법은 국가뿐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한 개인도 구속한다. ④ 국제 사회에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공식적인 입법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충 자료]

국제법과 국내법

구분	국제법	국내법
제정	당사국 간의 합의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해 제정
적용	다수의 국가 사이에 적용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
구속력	강제적 집행 기구나 집행 수단이 없어 구속력이 약함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가해 지므로 구속력이 강함

12 A는 국제 관습법이다.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외교관의 면책 특권, 집단 학살의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③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⑤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13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⑤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조약은 별도의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③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의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④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14 (가)는 조약,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① 조약은 체결 당사자가 둘인 양자 간 조약과 셋 이상인 다자 간 조약으로 구분된다.

[오답 풀이] ②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나)의 법의 일반 원칙의 예이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는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 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④ (다)의 국제 관습법과 달리 (가)의 조약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다. ⑤ (나)와 (다)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15 (1) 국제 관계

(2) [예시 답안]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사회적 교류가 증가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각국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국제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국제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국제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하나만 서술한 경우

16 (1) ㉠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등, ㉡ 국제 사면 위원회(AI), 국경 없는 의사회(MSF), 그린피스 등

(2) [예시 답안] 정부 간 국제기구(IGO)는 정부를 가입 주체로 하여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를 말하며,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개별 시민들이나 민간단체 등 비정부 행위를 가입 주체로 하여 이루어진 국제기구를 말한다.

[채점 기준]

상	㉠과 ㉡을 가입 주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중	㉠과 ㉡을 가입 주체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과 ㉡ 중 하나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1** 오늘날의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념 대결로 인해 동맹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이 최우선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각국이 군사 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2**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 ㉣은 국제법 학자의 학설이다. ㉡ 국제 관습법의 사례로는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외교관의 면책 특권, 집단 학살의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국가 간의 합의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존재한다. ③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의 예이다. ④ 국제법 학자의 학설은 가장 후순위의 판단 기준이다.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만 국내법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지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0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 등의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냉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 개혁을 둘러싼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이 조약을 계기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와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와 협력을 위하여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④ 제3 세계의 부상,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⑤ 미국과 소련의 몰타 선언(1989), 독일 통일(1990), 구소련의 해체(1991) 등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 사회는 다양한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체제의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였다.

**04**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A는 조약,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국제 관습법이다. ③ 국제 관습법(C)은 별도의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법의 일반 원칙(B)과 국제 관습법(C)을 의미한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④ 조약, 법의 일반 원칙,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사법 재판소의 재판 기준이 된다. ⑤ 법의 일반 원칙(B)과 달리 조약(A)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16 해설 참조

**01** 제시문의 밑줄 친 '이 문제'는 국제 문제이다.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말한다. ②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특정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답 풀이]** ①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 ③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④ 오존층 파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국제 문제는 문제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⑤ 국제 문제는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02** (가)는 집단 안보 전략, (나)는 세력 균형 전략이다. ② 국제 연맹(LN)과 국제 연합(UN)은 집단 안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집단 안보 전략은 국제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③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가)의 집단 안보 전략이다. ④ (가)의 집단 안보 전략은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것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핵심으로 한다.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나)의 세력 균형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03** 남북문제는 북반구에 위치한 부유한 국가들과 남반구에 위치한 가난한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갈등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비롯된 이 문제는 최근 세계화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04** 국제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 또한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 사회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제시된 사례는 각국이 기후 협약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5** (가)는 총회, (나)는 안전 보장 이사회, (다)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 상대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제 연합 및 산하 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무국이다. ②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로 1국 1표주의에 의해 표결하는 기관은 (가)의 총회이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재판이 가능하다.

**06**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②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3/5(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지만, 국가들의 이해가 걸린 실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반대 없이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을 인정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다수결 제도는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③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④ 국가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하다.

**07** 국제 연합은 6개의 주요 기관과 각종 전문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관에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국, 신탁 통치 이사회 그리고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있다. 각 주요 기관은 국제 연합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기관은 국제 형사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08** (가)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③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은 국적이 모두 다르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하다. ④ 국가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제 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09**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하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ㄴ.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5개의 상임 이사국만 거부권을 갖는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당사국에게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못하여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다.

**10** (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로, 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② 의결 과정에서 상임 이사국들에게만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회원국 간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③ 투표로 선출되는 국가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들이다.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④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이다.

**11** 제시문의 밑줄 친 '이 외교 정책'은 북방 외교이다. 북방 외교는 실리를 추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정책이다.

**12**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냉전 시기) → 외교 대상 국가 확대(냉전 완화 시기) → 북방 외교(1980년대 후반) → 실리 추구(1990년대 이후)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보충 자료]**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

- ① 1950년대(냉전 체제의 심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 전략 활용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치중
- ② 1960년대: 제3 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 확대
- ③ 1970년대(냉전 체제 완화): 국제 질서의 흐름에 부응하여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문호 개방
- ④ 1980년대 후반: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방 외교 시도
- ⑤ 1990년대 이후: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추구 예) 중국과의 수교,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세계 여러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등

**13**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 왔다. ③ 1950년대에는 냉전 체제의 심화로 인해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활용하였다. 즉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치중하였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나)-(가)-(다)-(라)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② 북방 외교는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정책으로 (다)에 해당한다.

01 ⑤ 02 ② 03 ① 04 ③

④ 기존의 자유주의 진영과의 외교와 병행하여 북방 외교를 실시하였다. ⑤ (라) 이후 정부 기관 중심의 외교와 더불어 문화, 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국제 문제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다국적 기업,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문화 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외래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면 경제·문화적 고립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안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교에 참여하는 등 총력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우리나라는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국제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15 (1) 국제 문제

(2) [예시 답안]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 하나의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 사회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등

[채점 기준]

상	국제 문제의 특징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국제 문제의 특징 두 가지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국제 문제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1) [예시 답안]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만의 제소만으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채점 기준]

상	강제적 관할권이 없음을 언급하여 ①의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①의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예시 답안] 국가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등

[채점 기준]

상	국내 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가지는 차이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내 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가지는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01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 제시된 사례들에서도 열대림 자원 수출 국들과 감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02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3/5(15개국 이상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지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반대 없이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자료에서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무역 제재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아 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표결이다. ③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3/5 이상의 찬성이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 임 이사국은 10개국이다.

03 제시문에는 세력 균형 전략이 나타나 있다. ① 세력 균형 전략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이 거꾸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를 안보 딜레마 문제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 인간과 국가를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 국제법 중시 등은 모두 집단 안보 전략과 관련된 설명이다. 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집단 안보 전략이다.

04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제3 국가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다. 1970년대에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며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하였고, 1980년대에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방 외교를 펼쳤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강화하였다.



## 중간·기말고사 대비 대단원 평가 문제

### I 민주주의와 헌법

112쪽

-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16 해설 참조

**01** 갑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 을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ㄱ. 갑과 을 모두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이해한다. ㄴ. 을은 갑과 비교하여 정치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갑과 을 모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로 본다. ㄹ.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규칙 제정 과정을 을은 정치로 보지만, 갑은 정치로 보지 않는다.

**02** A는 현대 민주 정치, B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근대 민주 정치부터 실현되었다.

**[오답 풀이]** ① 현대 민주 정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참정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②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 민주 정치를 성립하게 된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다. ③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것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이다.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의 차별이 존재했다. ④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 민주제를 바탕으로 한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03**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④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고, 로크는 입헌 군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보았다.

**[오답 풀이]** ①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이다. ③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사회 계약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인하며 국가는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적 장치임을 강조하여 시민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⑤ 통치자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저항권은 로크만 인정하였다.

**04**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청구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므로 법률 제정 절차의 준수를 중시한다.

**[오답 풀이]**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보다 형식을 더 중시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중시한다.

#### [보충 자료]

##### 법치주의의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 등 통치의 형식만을 강조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

**05**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국가 이념을 추구한다.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는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추가하였다.

**[오답 풀이]** ①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최초 형태이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재산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통치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06**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제 평화주의, (다)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②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가)의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 풀이]**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③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다. ④, ⑤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보충 자료]

#####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자유 민주주의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복지 국가의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함
국제 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평화 통일 지향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함
문화 국가의 원리	국가는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함

**07** ㉠은 평화 통일 지향, ㉡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ㄱ.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의 책무를 부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교류의 확대, 남북

간 대화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ㄷ.** 문화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ㄹ.** 우리 헌법이 국가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08** A는 자유권, B는 평등권이다. ⑤ 자유권과 평등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②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실제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09** 갑과 을이 공통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다. 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② 사회권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④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장된다.

**10** 포괄적 권리인 (가)는 자유권, 적극적 권리이면서 정치적 권리가 아닌 (나)는 청구권, 적극적 권리이면서 정치적 권리인 (다)는 참정권이다. **ㄱ.**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ㄷ.** 참정권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오답 풀이]** **ㄴ.** 청구권은 적극적 성격을 갖는다. **ㄹ.** 자유권은 천부 인권의 성격을, 청구권과 참정권은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다.

**11** 을이 강조하는 평등의 원칙은 상대적·비례적 평등이다. 상대적·비례적 평등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에 따른 세율 적용,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금 지급, 청소년의 위험한 직업 종사 금지 등은 모두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⑤ 선거권을 재산에 관계없이 1인 1표씩 부여하는 것은 절대적·획일적 평등의 사례이다.

**12** **ㄱ.**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ㄷ.** 과잉 금지의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오답 풀이]** **ㄴ.**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조례, 명령, 규칙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13** (1) 천부 인권 사상, 계몽 사상, 사회 계약설  
(2) **[예시 답안]**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 계급이 건설하려 한 '새로운 사회'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이다.

**[채점 기준]**

상	신분제 폐지를 언급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신분제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만 서술한 경우

**14** (1) (가) 루소, (나) 로크  
(2) **[예시 답안]**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고 개인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채점 기준]**

상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근대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근대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5** (1) 국제 평화주의  
(2) **[예시 답안]**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6** (1) 갑: 형사 보상 청구권, 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병: 청원권  
(2) **[예시 답안]** (1)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채점 기준]**

상	청구권이라고 쓰고, 청구권의 의미와 성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청구권이라고 쓰고, 청구권의 의미와 성격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청구권이라고만 쓴 경우

-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⑤  
 13~16 해설 참조

- 01**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는 A는 의원 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B는 대통령제이다. ③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오답 풀이]**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수상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 02** 갑국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경하였다. 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다수파에 의해 장악되어 다수파의 횡포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답 풀이]** 가.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을 잃은 내각은 사퇴해야 하므로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의 정치적 책임감이 높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 행정부 수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정부 형태는 (가)의 대통령제이다.
- 03** 제시문에 내각과 의회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제시문을 통해 갑국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였고, 이에 맞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갑국에는 과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으므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행정부 수반이 어느 당 출신인지 알 수 없다. ③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다. ④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⑤ 의회 의원이 국민의 선거로 새로 선출되면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될 것이다.
- 04** A는 정기회, B는 임시회이다. ⑤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회의 유형에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오답 풀이]** ①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정기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③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④ 정기회, 임시회 모두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05** (가)는 헌법 개정 절차, (나)는 법률안 제·개정 절차이고, ㉠은 국회 의결, ㉡은 상임 위원회이다. ④ 헌법 개정 절차에서 공고와 공포는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상임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은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없다.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법률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③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 06**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오답 풀이]** ①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③ 국방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④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등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의 국회 견제 수단은 법률안 거부권이다.
- 07** 제시된 내용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기관은 감사원이다. ④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감사원장은 국무 위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다. ② 감사원은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 내부의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③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08** A는 대법원, B는 고등 법원, C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은 항소 또는 항고이다. ② 대통령, 국회 의원, 비례 대표 시·도 의원,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①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이다. ③ ㉠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은 항소 또는 항고이다. ④ 대법원과 고등 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정권을 가진다. ⑤ B는 고등 법원, C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 09**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하였다면,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재판 중인 법원은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④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〇〇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같은 〇〇법 위반을 이유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10** (가)는 삼권 분립, (나)는 지방 자치에 대한 내용이다. ㄱ. 삼권 분립은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ㄴ. 지방 자치는 정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권력 분립의 실현에 기여한다. ㄷ. 삼권 분립과 지방 자치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ㄷ. (가)는 수평적 권력 분립, (나)는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11** 지방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지방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ㄴ.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 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ㄷ. 지방 의회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다.

**[오답 풀이]** ㄱ.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ㄷ.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12**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자치 단체장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 내에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ㄷ.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지방 의회의 부당한 예산 편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ㄹ.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3** (1) (가) 대통령제, (나) 의원 내각제

(2) **[예시 답안]**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고,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채점 기준]**

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4** (1) (가) 법률안 거부권, (나) 사면권

(2) **[예시 답안]** (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나)는 법원이 판결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가), (나)의 견제 방법과 견제 기관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 (나)의 견제 방법과 견제 기관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가), (나)의 견제 기관만 서술하고 견제 방법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15** (1)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2) **[예시 답안]**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헌법 소원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가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가능' 중 한 가지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가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16** (1) **[예시 답안]**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자료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자료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예시 답안]**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등 조세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1)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1)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③
  -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③
- 13~16 해설 참조

**01** (가)는 현대의 정치 과정, (나)는 과거의 정치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가 정치 과정을 주도하였지만, 현대에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ㄷ.**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정치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ㄱ.** 현대의 정치 과정에서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비공식적 정치 주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ㄴ.** 과거의 정치 과정에서는 상의하달(上意下達)식 의사 결정을 강조하였다.

**02** 투입 과정은 시민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이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로, 서명 운동, 입법 청원, 집회와 시위 등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민주적인 정부에서 강조된다. ③ (나)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이 해당한다. ④ 선거는 환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⑤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정치 과정 전체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03** **ㄴ.** (나)의 시민 단체 활동이 (라)의 청원보다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ㄷ.** (가)의 국민 투표 참여와 (라)의 청원은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고, (나)의 시민 단체 활동과 (다)의 시위 참여 활동은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오답 풀이]** **ㄱ.** (가)와 (다)는 모두 합법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ㄹ.** (가)의 국민 투표 참여만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에 해당한다.

**04** 갑국은 선거권 연령에 도달한 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을국은 투표 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병국은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보충 자료]**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평등 선거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표를 부여하는 원칙(1인 1표 원칙) → 표의 등가성 실현
직접 선거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
비밀 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

**05** **ㄴ.** T+1 시기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5% 미만 득표한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게 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ㄹ.** T+1 시기에는 비례 대표 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것이다.

**[오답 풀이]** **ㄱ.** T 시기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T+1 시기에는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어 T 시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하다.

**06** (가)는 단순 다수 대표제, (나)는 절대 다수 대표제(결선 투표제), (다)는 비례 대표제이다. ④ 다수 대표제는 주요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례 대표제이다.

**[오답 풀이]** ① 다수 대표제는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②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다. ③ 비례 대표제에서는 비례 대표 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⑤ 절대 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07** 갑국은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B당의 지역구 의석률(40/200×100)과 전국구 의석률(12/60×100)은 20%로 동일하다.

**[자료 분석]**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득표율(%)	전국구 의석수	총 의석수
A	100	45	40	140
B	40	30	12	52
C	30	10	4	34
D	25	10	4	29
E	3	3	0	3
F	2	2	0	2
계	200	100	60	260

**[오답 풀이]** ①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갑국은 연립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②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0%(100/200×100), 총 의석률은 약 54%(140/260×100)이다. ④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갑국처럼 지역구 의석수 제당에게 비례 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⑤ C당과 D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에 비하여 의석률(C당은 15%, D당은 12.5%)이 더 많이 대표되었다.

**08**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자율적으로 결성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①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 주체는 정당(B)이다. ② 과도한 이익 추구로 국민 전체의 이익과 상충하기도 하는 정치 주체는 이익 집단(C)이다. ③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B)이다. ④ 정당(B)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정치 주체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시민 단체(A)와 이익 집단(C)이다.

09 제시된 자료는 정당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나)로 갈수록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가까움을 나타낸다.

[보충 자료]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  
당원이 아닌 사람도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민주화가 강조되면서 공직 선거 후보를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후보자 선출에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여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10 ㉠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이고, ㉡은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만이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11 공정 선거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시민 단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B는 이익 집단이다. ④ 이익 집단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정당에서는 일정한 선출 과정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한다. 따라서 시민 단체가 정당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국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③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12 '공정하고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위해서는 기사의 선정이나 해설 등의 권한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제시문의 필자가 언론사 소유주는 기사 선정이나 해설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편집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예시 답안]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4 (1) A당 152석, B당 62석, C당 64석, D당 10석, E당 4석, F당 3석

[자료 분석]

E당과 F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40석(36/90×100), B당이 30(27/90×100)석, C당이 20석(18/90×100), D당이 10석(9/90×100)이다. 총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합산하면 된다.

(2) [예시 답안]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채점 기준]

상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5 (1) A 이익 집단, B 시민 단체

(2) [예시 답안]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시민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채점 기준]

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언론은 사실에 기인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언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언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⑤ 12 ⑤  
 13~16 해설 참조

- 01**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것은 공적 생활 관계로 A는 공법(公法)에 해당한다. 혼인과 이혼은 사적 생활 관계로 B는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다.  
**[오답 풀이]** ㄱ.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등은 사법인 민법의 규율 대상이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 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사법보다 공법이 엄격하다.
- 02**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라)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ㄱ.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ㄴ.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오답 풀이]** 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에 대해 공공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대신하는 원칙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보완적인 원칙이다.
- 03** ㄱ.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이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ㄴ. 을은 8세로 책임 능력이 없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감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ㄴ. 갑이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므로, 갑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 증명할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04**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다른 사람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수 불법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과 (나)의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은 모두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동물의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상황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공작물의 점유자는 1차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2차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 05** ㄴ. 갑이 책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라면 을은 갑의 감독자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인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을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갑과 을의 과실 비율을 추정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과실 상계라고 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과실만큼 손해를 제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06**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의 유리창이 떨어져서 갑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 풀이]** ① 을과 병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④ 을의 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집주인인 병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③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작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갑이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
- 0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이라고 한다. ㄴ. 을, 병, 정이 모두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을, 병, 정은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ㄴ. 을, 병, 정이 모두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갑의 부모는 을, 병, 정 모두에게 균등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불법 행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본다. 따라서 망을 보았던 을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ㄴ. 을, 병, 정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본인들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 병, 정은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08**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이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 등이 인정되지만,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 관계나 상속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ㄱ.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ㄴ.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배우자 간에 법정 상속권이 발생한다. ㄷ. 사실혼과 법률혼은 모두 부부 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오답 풀이]** 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 양방의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혼인 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

**09**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되어 행위 능력자로 본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갑은 성년 의제되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병은 갑의 부모에게 냉장고 구매 계약에 대한 취소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갑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③ 갑은 성년 의제되었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갑의 부모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A는 배우자의 사망 등에 의한 혼인의 해소, B는 협의상 이혼, C는 재판상 이혼이다. ㄷ. 재판상 이혼은 가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풀이]** ㄴ. 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ㄷ. B와 C 모두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11** ㄴ. B는 병과 정 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혈연관계의 자녀이므로 친생자이다. ㄷ. 어느 한쪽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친권은 자녀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A는 갑과 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12** 법정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손속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받는다. 해당 사례에서 을은 갑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없고, 정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A는 다른 집에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갑과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어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권자는 B밖에 없다. ⑤ 갑이 '전 재산을 병에게 물려준다.'라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유일한 법정 상속권자인 B는 법정 상속분의 1/2인 7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병은 법정 상속 순위가 2순위이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② 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B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③ 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정과 혼인 신고를 하였더라도 C는 갑의 직계 비속이 아니므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④ 갑이 '전 재산을 정에게 물려준다.'라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B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3** (1) (가) 과실 책임의 원칙, (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

(2) **[예시 답안]** 현대 사회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병존하여 적용된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대신하는 원칙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보완적인 원칙이다.

**[채점 기준]**

상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병존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4** (1) (가) 인지 절차, (나) 입양

(2) **[예시 답안]**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 입양은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은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어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채점 기준]**

상	(나)의 유형과 상속과 관련한 차이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나)의 유형과 상속과 관련한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나)의 유형만 제시한 경우

**15** (1) 일상 가사

(2) 을이 A와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을이 A의 돈을 갚아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을'이라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을'이라고만 쓰고, 이유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6** (1) 을: 6억 원, 병: 4억 원, 정: 4억 원

(2) **[예시 답안]** 을과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을은 6억 원의 1/2인 3억 원, 병은 4억 원의 1/2인 2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을과 병의 상속액을 바르게 쓰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을과 병의 상속액을 바르게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을과 병의 상속액만 바르게 쓴 경우

- 01 ④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④  
 13~16 해설 참조

01 ㄱ, 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명칭과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ㄷ. 형법은 범죄를 예방하여 개인의 생명, 재산 등과 같은 법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오답 풀이] ㄷ.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국가가 간섭하여 일정한 형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02 ㉠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만 있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로 이해된다.

[오답 풀이] ㄴ.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고 적절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03 ㄴ. 갑은 을의 집을 파손하였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ㄷ. 갑은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ㄱ. 갑은 소방관을 할 수 있는 성인이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 조각 사유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폭력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이 해당한다. ㄷ. 정당방위는 자기 또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갑의 행위에는 적합하지 않다.

04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데, 이를 형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이 있다. ㄴ. 징역과 금고는 모두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시키는 형벌이다. 그러나 징역과 달리 금고에는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ㄷ. 벌금과 과료는 재산형이며,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부과된다.

[오답 풀이] ㄱ.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다. ㄷ.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은 몰수이다.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예형이다.

05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수사·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한다.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로 구분된다. ③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공소 제기를 한 검사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② 수사의 개시는 고소 및 고발, 현행범 체포,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 절차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된다.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06 갑은 구속 수사를 받았고 구속 기소되었지만, 징역 1년의 선고가 확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검사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므로, (나)에서 구속 기소가 된 후에도 피고인인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다)의 선고 이후 (라)의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다)의 선고로 갑에게 형이 집행될 수 없다. 또한 이와 별개로 1심에서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④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의 1심 사건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는 2심 재판이므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07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고, 10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ㄴ. 을은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ㄷ. 병은 갑과 달리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을과 병은 모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충 자료]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 10세 미만: 어떠한 형사 제재도 받지 않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 처분만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또는 보호 처분 가능

08 (가)는 선고 유예, (나)는 집행 유예이다. ㄱ. 선고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는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ㄷ.** 선고 유예, 집행 유예는 모두 유죄 선고의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ㄴ.** 선고 유예 또는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석방된다.

**09**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 갑을 심신 상실자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고는 검사가 하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원심 판결이 ○○ 고등 법원이고, 주문에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자료는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라 갑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다. ④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피고인 갑을 심신 상실자로 인정하였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⑤ 갑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던 경우에만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갑이 무조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ㄴ.** 기본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다. 따라서 제시된 근로 계약서의 근로 시간이 9시간이므로 근로 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ㄷ.** 임금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1회 이상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로 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오답 풀이]** **ㄱ.** 근로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ㄷ.** 을이 연소 근로자라도 휴일, 휴식 시간, 최저 임금 등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최저 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의 임금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11** (가)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나)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다. **ㄴ.**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오답 풀이]** **ㄱ.**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소된 피고인은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하지 못한다. **ㄷ.** (나)를 통해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없는 것이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수사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12** **ㄱ.** 부당 노동 행위는 부당 해고와 달리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당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ㄷ.** 갑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을은 부당 해고에 대해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행정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13** (1) (가) 치료 감호, (나) 사회봉사 명령, (다) 보호 관찰  
(2) **[예시 답안]** 범죄자의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채점 기준]**

상	보안 처분의 의의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보안 처분의 의의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4** (1) ㉠ 형사 보상 제도,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2) **[예시 답안]**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속 수사를 받고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속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5** (1) 배상 명령 제도  
(2) **[예시 답안]**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손해 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채점 기준]**

상	배상 명령 제도의 의미와 의의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배상 명령 제도의 의미와 의의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배상 명령 제도의 의미와 의의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1) (가) 긴급 피난, (나) 정당방위  
(2) **[예시 답안]** (가)의 갑은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으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나)의 을은 자신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가), (나)의 사례가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 (나)의 사례가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가), (나)의 사례가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가), (나)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①
08 ⑤	09 ②	10 ②	11 ②	12 ③		
13~16 해설 참조						

**01** 제시문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2** (가)는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나)는 몰타 선언(1989년), (다)는 트루먼 독트린(1947년)이다.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 개혁을 둘러싼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고 주권 국가가 국제 관계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ㄴ. 트루먼 독트린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으로 냉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답 풀이]** ㄴ. 몰타 선언 이후 독일이 통일(1990)되고 소련이 붕괴(1991)되면서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ㄷ. (가)-(다)-(나)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03** 국경 없는 의사회는 개별 시민들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비정부 기구이며,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고, 민간 의료 구호라는 제한적 기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04** ㄴ. 국제 사면 위원회(AI)는 개별 시민들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비정부 기구이며, 국제 사면 위원회와 같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는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다. ㄷ. 초국가적 행위체는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이다. 초국가적 행위체에는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이 있다.

**[오답 풀이]** ㄱ. 유럽 연합은 정치, 경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의 국제기구이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적 국제기구이다. ㄴ.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에 공장과 지사를 두고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갑은 세력 균형 전략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을은 집단 안보 전략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한 집단 안보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홉스의 인간관에 기초한 현실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무정부 상태가 일반적이라고 가정한다. ③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⑤ 갑은 현실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06** (가)는 국내법, (나)는 국제법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제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활용된다.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국제법은 외교, 국제기구의 활동, 그 밖의 상호 교류의 강화 및 국제 협력 등과 함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국제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국가 간 분쟁에서 경제, 환경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⑤ 국제법 중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07** ①의 협정은 조약이다. ①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명시적 합의로, 우리나라 헌법(제73조)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조약은 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비준한 조약에 대하여 국내법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조약은 법의 일반 원칙과 별개인 국제법의 법원이다. ⑤ 우리나라 헌법(제60조)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08**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이다. ㄴ.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ㄷ. 조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를 거쳐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오답 풀이]** ㄱ.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조약의 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ㄴ. 조약은 주로 명시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9** (가)는 남북문제이다. 남북문제는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과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갈등으로, 국제 문제 중 하나이다. ② 남북문제와 같은 국제 문제는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답 풀이]** ③ 남북문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부의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④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 ⑤ 남북 문제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A는 국제 연합의 총회, B는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다. ㄱ. 국제 연합의 총회에서 안전을 의결할 때에는 모든 회원국이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한 표씩 행사하게 된다.

ㄷ.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3/5(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반대 없이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ㄴ. 의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기관은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ㄷ.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 연합의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11** (가)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② 판례 및 국제법 학자의 학설도 재판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하다.

**[보충 자료]**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라.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12**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 왔다. ③ 이념과 안보 중심의 외교 노선은 냉전 체제가 심화되었던 1950년대의 외교 정책이다.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던 1970년대에는 국제 질서의 흐름에 부응하여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오답 풀이]** ① 1950년대에는 냉전 체제의 심화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치중하였다. ② 1960년대에는 제3 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외교 전략을 활용하였다. ④ 1980년대 후반에는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방 외교를 시도하였다. ⑤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 이후에는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13** (1) A 전략: 세력 균형 전략, B 전략: 집단 안보 전략  
 (2) **[예시 답안]** 세력 균형 전략은 '안보 딜레마', 즉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으로써 거꾸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집단 안보 전략은 현실 세계에서 국가들이 규범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채점 기준]**

상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보 전략의 한계를 한 가지씩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보 전략의 한계를 한 가지씩 서술하였으나,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보 전략의 한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4** (1) (가) 법의 일반 원칙, (나) 국제 관습법, (다) 조약  
 (2) **[예시 답안]** (다)의 조약은 주로 명시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로 작성되며 작성국 간에만 구속력이 발생하나, (나)의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채점 기준]**

상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점을 절차 및 구속력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점을 절차와 구속력의 범위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하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5** (1) A 총회, B 안전 보장 이사회  
 (2) **[예시 답안]**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되고,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채점 기준]**

상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을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예시 답안]**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채점 기준]**

상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를 제재 수단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집중력을 높이는  
미로 Game

